폭염 대응 나선 전통시장…온누리 가맹점 갱신 속도

중기부, 전남광주 등 지방청별 대응 현황 점검
14만7000개 가맹점 대상, 신청 편의·현장 지원

연일 이어지는 극심한 폭염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관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갱신까지 맞물리면서 전남광주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 지원이 강화된다.

10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 회의'를 열고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폭염 대응 상황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갱신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대응 현황과 향후 대책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별 점포와 공용공간에 쿨링포그와 이동식 냉풍기 등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시장 인근에 살수차를 운행하고 공용 통로에는 얼음 생수 나눔 냉장고를 운영하는 등 현장별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키트를 지원하는 한편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온열질환 및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폭염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단기적인 냉방시설 지원을 넘어 냉방설비 확대 등 중장기적인 대응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광주 지역 전통시장 역시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에 따른 상인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커지고 있어 냉방시설 확충과 전기화재 예방 등 현장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갱신이라는 새로운 현장 과제도 더해졌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3년의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갱신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오는 10월 18일 약 14만7000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대상 가맹점은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중기부는 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인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갱신 기간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원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해 신청 방법 안내부터 서류 검토와 보완까지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갱신 대상 가맹점에는 알림톡과 디지털온누리 앱 푸시 알림 등을 통해 신청 일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16개 금융기관 및 환전대행가맹점과도 협력해 신청서 작성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본부와 지방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참여하는 '가맹점 유효기간 갱신 TF'를 운영하고 일 단위로 갱신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월 2회 점검회의를 열어 지역별 추진 상황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맹구역을 확인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한 안내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폭염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냉방시설 운영과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지방청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대상 가맹점이 신청 기한 내 원활하게 갱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도 신속히 파악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앞으로도 전남광주를 비롯한 지역 전통시장의 폭염 대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갱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중기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 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갱신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지방소멸 대응 개인·기업 발굴

31일까지 접수…지역 일자리·생활인구 확대 기여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 확대 등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단체를 발굴한다.

중기부는 10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알리고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그동안 지역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고유의 자원과 산업 기반을 활용한 연고산업 육성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해 왔다.

올해는 지역 특화자원의 생산과 가공, 유통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지역 안에서 연계하고 디자인·브랜딩을 접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소외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포상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개인과 기업·기관까지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포상 규모는 중기부 장관 표창 9점이다. 소멸 위기 지역에서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지역 자원 사업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중소기업, 기관·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접수된 추천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창장은 오는 11월 열리는 '2026년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수여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은 중기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남광주 스타트업, 공공데이터 품는다

중기부, 기술검증·사업화 지원…기업당 최대 1억원

전남광주지역 스타트업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을 검증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기술검증(PoC)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의 협업과제를 1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연결해 신사업 진출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특히 공공기관이 과제를 제시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과 스타트업이 직접 공공기관에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탑다운 방식은 공공기관이 공개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매칭해 협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바텀업 방식은 스타트업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공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협업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력해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 활용이 실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의 58.5%가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41.8%는 서비스 고도화, 26.7%는 제품·서비스의 타깃 고객 확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업과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보유 데이터를 연계해 신사업 진출과 사회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혁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20개사 내외이며,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원은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매칭부터 밋업(Meet-up), 기술검증(PoC), 시제품 제작 등 협업과제 수행까지 이어진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